

파월, 트럼프 행정부 직격… “관세로 금리인하 어려워져”

〈연준 의장〉

美 기준금리 ‘안갯속’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 압박
파월, 고율관세 파급효과 우려
시장선 ‘9월 금리인하설’ 무게

“관세가 아니었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 참석해 패널 토론자가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를 더 인하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인하를) 보류했다”고 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시스

◆ 파월 “관세 영향 지켜봐야”

연준이 물가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5% ▲2월 2.5% ▲3월 2.3% ▲4월 2.1% ▲5월 2.3%로 목표치(2%)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근원(Core)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3월과 4월 2.6%, 2.5% 감소한 뒤 5월 2.7%로 상승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은 개인의 소비지출 중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지수다. 여전히 소비자가 느

끼는 물가는 높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인구는 한달 전보다 3만8000명 감소한 1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 지출 등이 늘지 않아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의료, 호텔·요식업, 사회 복지 부문의 고용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0.2%에서 0.4% 상승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줄인다고 했다. 경기 위축보다는 연방 정부 고용 2만2000명을 포함한 총 5만 9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비농업 고용인구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업률도 1월 4.0%에서 3월 4.2%로 오른 뒤 5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韓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가 7월보다는 9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 협상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29~30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시기에는 관세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워 한차례 더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거래자들은 이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8.3%로 보고 있다. 한 달 전(74.3%)과 비교하면 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71.8%다. 특히 금리선물 거래자들은 9월 금리가 0.25%p 내리는데 71.8%, 0.5%p 내리는데 1.92%의 확률을 반영했다. 동결(8.9%)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2%p다. 금리를 인하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투자자금이 줄어들며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금리 인하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더 부추겨 부동산 가격이 상승, 자산이 부동산에 쏠릴 가능성도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상호관세 임박… 韓, 시한연장 기대감

산업부, 트럼프 행정부 협상 지속
“유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적인 시한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과의 관세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8일 이후 추가적인 관세협의를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1~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3차 실무 기술 협의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하고 추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를 받지 못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추가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하게 될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계속 리밸리브레이션(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간담회를 갖고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57개 무역상대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19.2%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

은 5.0% 감소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또 국가간 경쟁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수출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수입시장 내 입지가 축소된 중국을 대체하며 부상한 멕시코와 인도가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7월 발효된 USMCA에 따라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인도는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전략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휴가철·추석 물가관리 나선다

기재부 물가관계자관회의

배추 3만t 방출·한우 반값판매 지원

정부가 올 추석 전까지 배추 3만여 톤(t)을 방출하고 한우의 반값 판매를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책을 실시한다. 또 여름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사진)은 2일 물가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수급 안정 및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며 “(지난) 6·16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우선 추석 전까지 약 3개월간 배추 총 3만6000t을 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가용물량을 1만3000t 확대한 규모다. 최근 가격이 뚝 잡자의 경우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사과와 배는 정부의 가용물량을 각각 총 1만 2000t, 4000t으로 확대해 비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된다. 브라질이 AI 청정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평가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는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최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9차 물가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50%까지 할인판매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산 소고기는 냉장구이류를 이달 중 4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6000헥타르(ha)에서 6만 7000ha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수요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휴가철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피서지의 먹거리, 숙박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신고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외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